

## “껍데기만 통합 거부” 정부 성토장 된 특별법 공청회

광주·전남 요구 374개 특례 중 119개 조항 정부 부처 불수용 강력 반발  
신정훈 위원장 “정부 분권 의지 미흡”...강기정 시장 “20조 지원 명문화”

국회와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기사 3면>  
지역의 여망을 담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수록한 374개 특례 가운데 무려 110여개 조항이 정부 부처에서 불수용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본관 제3회의장에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요구한 374개 특례 중 119개 조항이 불수용되었다고 한다”며 “정부의 태도는 단순히 두 이름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방정석에 자리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강 시장은 “통합 추진 35일 만에 386조 중 110개 정도의 조항이 부동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한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이 현재 특별법 발의안에 담겨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 걱정이 크다.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특별법 조항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지역 미래 산업과 직결된 에너지 관련 특례, 영농형 태양광, 차등 전기 요금제, 인공지능(AI) 관련 특례 조항 등이 부처에서 부동의된 점을 지적하며 “핵심 특례들이 시범적으로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기업이 지역으로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통합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 조항들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 차관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119개 핵심 특례 불수용 건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

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한도 예외 적용과 재정 위기 단체 지정 배제 등 자치 재정권의 핵심 조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지방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는 특목고 설립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수용 범위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잘라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매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위해 재정지원 TF를 운영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재정 당국과 고민하고 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은 서울시 수준의 대우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작 실무 부처는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분권의 실체냐”고 직격했다.

신 위원장은 김 차관의 답변을 두고 “정부의 태도는 단순히 두 이름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며, 지방에 성장을 주도할 권한을 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구조적인 재정 분권 없이는 통합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 위원장은 “하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주 내로 예정된 소위원회 심사에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부동의한 110여개 특례 조항을 법안에 관찰시키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양 시도는 지난 8일 열린 ‘제5차 지역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9일 밤 국무총리와 담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 시도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핵심 특례 수용 방안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최종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출전하는 이준서, 김길리 등 대표팀 선수들이 8일(현지시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훈련 중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쇼트트랙의 날 밝았다

한국팀, 올림픽 금빛 질주 시작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혼성계주를 신호탄으로 올림픽 메달 레이스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22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 오후 7시 59분(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혼성 2000m 계주 준준결승을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쇼트트랙은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한 ‘효자 종목’이다.

쇼트트랙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2년 알베르빌 대회부터 2022년 베이징 대회까지 금메달 26개를 포함해 총 53개의 메달을 따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쇼트트랙의 금빛 질주를 기대하고 있다.

혼성계주 대표팀은 여자 최민정(성남시청)·김길리(성남시청)·노도희(화성시청), 남자 임종언(고양시청)·황대현(강원도청)·신동민(고려대)으로 구성됐다.

혼성계주는 한국 쇼트트랙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종목이다.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 2022 베이징 대회에서는 준준결승에서 넘어지는 악재로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이후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호흡을 맞추며 전력을 끌어올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대표팀은 ‘에이스’ 최민정을 선봉에 세워 초반 흐름을 잡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혼성계주와 함께 여자 500m·1000m, 남자 500m·1000m·1500m, 여자 3000m 계주, 남자 5000m 계주 등 총 9개 세부 종목이 연이어 치러진다.

한편, 스노보드 알파인의 ‘베테랑’ 김상겸(37·하이원)이 9일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자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제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 노후 풍력발전기 ‘위험천만’ ▶6면

엄마기자의 육아일기 - 육아휴직 고민 ▶18면

KIA 아마미 캠프 - 김도영 부상관리 최우선 ▶22면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 Sulwhasoo

